

2012. 11. 20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월 20일(화) 09:30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“한국, 동아시아 통합 위해 소프트파워 적극 활용해야”

## KDI 개최, 동아시아 경제통합 국제학술세미나

###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

- 일 자: 2012년 11월 20일(화)
- 장 소: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(19층)
- 주 관: KDI · NIRA · IWEP of CASS · ADBI

□ KDI(원장: 현오석)는 11월 20일 『동아시아 경제통합 국제학술 세미나』를 개최,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발전과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담보할 실효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

- 이번 세미나는 ‘동아시아 통합구상과 한국의 역할’, ‘한·중·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’ 및 ‘동아시아 협력의 확대·심화와 새로운 도전’ 등 KDI가 2010년부터 수행해 온 포괄적인 동아시아 통합 방안에 관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논의의 장

□ 특히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“동아시아 통합은 성장과 안정, 연대의 삼각축에 기반해야 한다”면서, 한국은 통합 과정에서 “하드 파워보다는 지적·기업가적 리더십을 통한 소프트 파워를 적극 활용해 국제정치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함.

○ 그는 또한 동아시아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“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 통합,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융합을 비롯한 평화와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힘.

□ 세미나에는 이토 모토시게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, 허 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·경제연구소 부소장, 카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, 치아 시오 유에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한·중·일 및 아세안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, 역내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도전 과제와 해법에 관해 논의함.

❖ 문의: 전홍택 KDI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(02-958-4201)  
전소영 KDI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 연구원(02-958-4196)

- ❖ 첨부1. 프로그램
- ❖ 첨부2. 발표 요약

❖ 첨부1. 프로그램

시 간	일 정
09:00 ~ 09:30	<b>등 록</b>
09:30 ~ 10:00	<b>개회식</b>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환영사 박진근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
10:00 ~ 12:30	<b>세션 1.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</b> 사 회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1.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한국의 시각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발 표 2.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이토 모토시게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 겸 도쿄대학교 교수 발 표 3.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 허 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·경제연구소 부소장 발 표 4.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 치아 시오 유에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 론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김시중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박인원 고려대학교 교수
12:30 ~ 14:00	<b>오 찬</b>
14:00 ~ 15:50	<b>세션 2. 동아시아 역내협력 증진방안</b> 사 회 이토 모토시게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 겸 도쿄대학교 교수 발 표 5. 거시경제와 금융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발 표 6. 동아시아협력의 제도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발 표 7.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 신봉길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토 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

시 간	일 정
16:00 ~ 17:50	<p><b>세션 3.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새로운 도전</b></p> <p><b>사 회</b>  허 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·경제연구소 부소장</p> <p><b>발 표 8. 동아시아 경제 통합: 세계적 관점</b>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</p> <p><b>발 표 9. 동아시아 경제 통합: 아시아적 관점</b>  카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</p> <p><b>발 표 10. 동아시아 경제 통합: 동아시아 통합과 북한</b> 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</p> <p><b>토 론</b> 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 치아 시오 유에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은기운 숭실대학교 교수</p>

## 세션 1.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망

### "Korea's Perspective toward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"

####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한국의 시각

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

-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'아시아판 EU 전략'으로서 동아시아 통합 전략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함.
- KDI는 '동아시아 통합구상과 한국의 역할', '한·중·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' 및 '동아시아 협력의 확대·심화와 새로운 도전'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 진행
  -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초기조건, 기대효과, 통합방식, 결정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역할 모색
- 동아시아는 세계 3대 경제블록의 하나로 경제통합 달성에 충분한 자족성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
- 유럽통합의 초기조건과 비교해 안보이익을 공유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경우 통합을 매개할 공리적 이익의 실현이 중요하며, 경제 이외에도 정치, 외교, 환경,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가 요구됨.
- 동아시아 통합은 한·중·일과 ASEAN 모두에게 이득인 것으로 분석되며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임.

- 한·중·일 간 FTA 체결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한국의 경우, 한·중·일간 동북아시아 통합 이후 ASEAN+3로 확대하는 통합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성장과 안정, 연대의 삼각축에 기반한 통합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 -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통합,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융합을 비롯한 평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.
  - 현실적으로 한·중·일 FTA는 3국간 단일 협상보다 한·중 또는 한·일 FTA 체결 후 이를 매개체로 나머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NAFTA 방식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임
- 한국은 하드파워보다는 지적 또는 기업가적 리더십을 통한 소프트 파워를 적극 활용, 동아시아 통합 과정에서 국제정치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.
  - 정책정보제공을 통한 여론 동원과 결집을 유도하고, 통합 지연의 위험성과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동시에 통합 논의의 추진동력으로서 교류채널을 활성화할 필요
  -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협의체 설립 등을 통한 협력 증대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임.

**“Perspectives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
: Japanese Perspective”  
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**

이토 모토시게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/도쿄대학교 교수

-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확장된 동아시아의 FTA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자주의 의존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
- 동아시아 국가 간 외교관계가 발전하고 통합이 심화하면서, 회원국 수 증가와 난해한 협상 쟁점들로 인한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WTO 협상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FTA 네트워크 확장 필요성 증대
-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(gravity model) 분석을 통해 무역국 간 상호의존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봄.
  -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, 제조업의 경우 국제 노동 분화와 더불어 중간재 및 자본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아시아의 소비재 시장은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
- 21세기 무역 체제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내 상호 교류, 규제 조화, 국제화 등 부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
- 일본에서는 통합 방식, 국내 EPA 정책 우선순위, 역외국과의 관계, 자유화의 필요성 등 경제동반자협정(EPA) 및 FTA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.

## “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”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

허 판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

-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, 모두가 이익을 보는 포지티브섬(positive-sum)에서 제로섬(zero-sum)으로 다자관계의 방향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많은 위험과 도전 수반
  
- 국가(중국), 지역, 세계 차원의 다양한 금융 협력 방안
  - 세계적으로는 G20을 중심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 개혁
  - 지역 내 화폐협력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(CMIM) 중심의 환율 조정, 지역화폐의 사용 활성화, 아시아 채권 시장 개발
  - 지역 내 무역활성화를 위해,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및 지역무역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
  - 지역투자협정과 역외투자, 기반시설 투자 재원조달을 통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및 특별경제구역(SEZ)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
  -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나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지역 내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활용과 새로운 지역협의체 구성
  - 중국의 경우 인민폐 국제화를 위한 개혁 가속화, 항공자유화 추진 필요

# “ASEAN Perspective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”

##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

치아 시오 유에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

- 통합 방안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검토를 토대로 ASEAN의 입장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함.
  - ASEAN은 1992년 이래 ASEAN자유무역지대(AFTA), ASEAN 역내서비스기본협정(AFAS), ASEAN자유투자지대(AIA)를 통한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며, 2003년 ASEAN경제공동체(AEC) 창설 합의 이후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
  - ASEAN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의 경제통합 노력으로는 ASEAN+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(FTA),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(EAFTA),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(CEPEA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이 있음.
- AEC는 첫째, 시장과 생산기반 단일화, 둘째,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형성, 셋째, 공평한 경제 개발, 넷째,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 네 가지 추진 원칙에 기반
  - ASEAN은 2015년까지 기본적 수준의 AEC 형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 사업추진 완료 시기는 2015년 이후로 전망됨.
- ASEAN+1 형태의 FTA로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·뉴질랜드와 각각 다섯 건의 협정이 발효되었으며, FTA-plus, WTO-plus 방식으로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,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음.
- EAFTA-CEPEA에 대한 ASEAN 회원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을 통한 ASEAN 중심의 역내 경제 통합 방안 제시
  -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(EAFTA),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(CEPEA)에 대한 ASEAN 회원국 간 합의가 부재한 상황

- 포괄 범위, 절차, 가입 개방성, 경제 및 기술 협력, 촉진법, 경제통합, 개도국 특혜 대우 부문에 걸쳐 기존 ASEAN+1 FTA 및 EAFTA, CEPEA에 대한 일반 원칙을 확립할 필요

□ ASEAN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TPP 간 동아시아 역내자유무역지대 형성 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존재

- 경제 규모 및 편차, 무역 개방성, 개방의 내용과 정도 등에서 RCEP와 TPP 간 격차가 줄어들수록 통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
- 미얀마의 개방으로 아시아·유럽 협력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RCEP, TPP, ASEM을 3개의 블록으로 삼은 향후의 다자 무역체제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.

## 세션 2. 동아시아 역내협력 증진방안

### “Macroeconomy and Finance”

#### 거시경제와 금융

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

- 1997년 외환위기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2011년 유로지역 재정 위기 시점을 비교할 때 원화 환율 상승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.
  - 1997년 외환위기 시 IMF 구제금융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한·미 통화스왑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었으며, 이후 한국은 일본, 중국과의 통화스왑도 추진했음.
  - 또한 2011년 유로지역 재정위기 시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,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,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했음.
- 2000년 수립된 동아시아 최초의 지역 금융협력기구인 CMI체제는 2010년 CMIM으로 발전했음에도 충분치 못한 유동성 지원규모 등으로 한·중·일 3국에는 크게 유용하지 않고, 본격적인 3국간 통화금융협력체제로 발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.
  - CMIM이 AMF로 발전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최종대부자(lender of last resort)로 인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.
- 통화금융통합은 여타 경제·정치적 협력 이슈와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교역, 개발협력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.

○ 한·중, 한·일 양자간 FTA 및 한·중·일 FTA, 한·중·일 통화스왑, 한·중 원화/위안화 무역결제, 한·중·일 국채 상호투자, 한·중·일 바스켓 통화 도입,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한·중·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□ 한·중·일 3국은 역외의 통화금융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음.

○ 예를 들면 유럽금융안정기구(EFSF/ESM) 발행 채권에 대한 공동투자 발표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
# “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”

## 동아시아협력의 제도화

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

- 한·중·일 3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지난 10년간 ASEAN+3, ASEAN+6과 같이 그 범위를 확대시키며 발전하여 옴.
  - 한·중·일 3국 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(TCS: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)의 제도화는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임.
  - 이후 3국 협력은 다양한 직급의 정부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범위의 협력 안건을 논의하는 56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짐.
  - 3국 협력 조약을 기반으로 설립된 독립적 국제기구로서 3국 협력사무국은 3자 협력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 중임.
- 이론적 문헌에 의존해 온 양국 간 공식·비공식적 협력 제도화, 이상적인 국제제도 구축 등 3자 협력의 공식·비공식적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.
  - 3자 협력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에 바탕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도화의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하며, 특히 쟁점분야에 따라 제도화 수준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음.

**“Trilateral Cooperation  
: A Building Block for East Asian Cooperation”  
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**

**신봉길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**

- 2012년 4월 15일 제1차 한·중·일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, 5월 13일의 제5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에서는 정상들이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, 3국 간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한·중·일 3국 협력사무국은 중대한 진전을 이룸.
- 또한 한·중·일 3국 협력사무국 출범 1주년을 맞아 『2012년,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·중·일 3국간 협력(2012: Year of Transition and the Trilateral Cooperation)』을 주제로 10월 15일 서울에서 3국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.
- 한·중·일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통합에 필수적
  - 중국, 일본, 한국은 세계 2위, 3위, 15위의 경제대국으로, 이들의 국내총생산(GDP) 총합은 세계 GDP의 20%에 이르며, 동아시아 GDP 총합의 80%이상
  - 세 국가는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(CMIM)의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- 한·중·일 3국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의 축으로 종합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고, 지역 내 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생산능력화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
-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협력 메커니즘인 한·중·일 3국 협력과 ASEAN의 제도적 강화를 모색해야 함.

□ 각국이 전체 운영자금의 1/3씩을 부담,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3국 협력 사무국 조직은 현재 신봉길 사무총장(한국), 마츠가와 루이 사무차장(일본), 마오닝 사무차장(중국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무총장은 2년마다 각 국에서 순환 역임함.

□ 3국 협력사무국의 주요 기능과 활동

-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, 잠재적 협력 사업 발굴 및 확인, 협력사업 평가와 보고서 작성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적보고서 제출, 3국 협력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,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, 국제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

## 세션 3. 동아시아 경제 통합과 새로운 도전

### “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: Global Perspective”

#### 동아시아 경제 통합: 세계적 관점

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

- 최근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(Regionalism)는 DDA(Doha Development Agenda, 도하개발아젠다)의 잠재적 실패가능성이라는 압박 속에 다자주의와 공존
  - 지역주의에 기반한 역내무역이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은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침.
  -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등장은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
- 역내 경제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TPP, FTAAP, RCEP 등 역외 국가들을 포함해 점차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.
  - 이는 ‘스파게티볼’ 효과와 같이 서로 다른 선호체계의 난립으로 세계무역체계의 복잡화를 초래하고, DDA의 다자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적 공익 약화와 과도한 유지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.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FTA 체계의 간결화를 도모하고, 다자주의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륙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  -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, EU의 적절한 파트너로서 동아시아의 범지역적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필수적

## “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: Asian Perspectives”

### 동아시아 경제 통합: 아시아적 관점

#### 카이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연구소 소장

- 동아시아는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, 역내 경제 및 금융 협력의 중추로서 ‘아시아의 세기’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
  - 교역, 투자, 금융 관계를 통한 시장 주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, 화폐 및 금융 협력, 인프라 연결사업 등 다각도의 지역 협력 추진
-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는 TPP와 RCEP의 두 가지 통합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
  - TPP와 RCEP 모두 아시아-태평양 경제 공동체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, 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상호 협조와 이해 필요
- 화폐와 금융 부문에서는 역내 안정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, 실질적 아시아통화기금을 마련해야 함.
  - ASEAN+3 재무장관들의 합의로 ERP, CMIM, ABMI 등 거시 및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작용
  - AMRO를 통한 지역감시체제의 강화 및 CMIM의 확장, IMF와의 연계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아시아통화기금(AMF)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과도한 역내 환율 변동성을 예방할 수 있는 환율정책 조율 방안 마련 또한 요구됨.
- 인프라 연결성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시설 기준의 조화 및 수익성 사업 발굴,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기반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

-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ASEAN 인프라 기금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, 범아시아 인프라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조기구 마련도 가능
  
-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범아시아 인프라 포럼, 아시아 인프라 기금, RCEP와 TPP의 연결, 아시아통화기금, 금융안정성 협조체계, 범블자문기구, 지역 공공재 포럼, 경제협력회의 등과 같은 부문의 제도화가 필수적

## “East Asi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n Issues”

### 동아시아 경제 통합: 동아시아 통합과 북한

####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

#### □ 동아시아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의 해결이 필수적

-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충분히 성숙한다 해도 북한 문제가 불거지면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,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.
- 반면, 북한 문제의 현명한 해결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를 강화시키는 지역협력의 동향을 촉진할 수 있음.
-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,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.

#### □ 동아시아 통합 관점에서 보는 북한,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북한의 시각 양자에는 긍정적, 부정적 요인이 모두 존재함.

- 동아시아 협력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 생산네트워크의 강화,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의 병목요인 해소,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한 대륙 간 프로젝트의 연결 가능성 등의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
- 반면 북한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참여함으로써 외화 획득,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나, 개혁개방에 따른 체제의 위협으로 중국과의 교역만을 유지하는 등 제한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.

#### □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의 개혁을 유도, 지역통합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체제 위협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

- 개성공단, 황금평과 같은 특구지역에 대한 3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·중·일 FTA를 무역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.
- 한·중·일 FTA에서 확대된 남·북 FTA의 체결은 북한 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,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, 한국의 경우 상호간 거래로 최혜국조항과 같은 타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음.
- 한·중·일 구조조정기금(A3Fund)을 조성, 위기 시 긴급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.
- 한·중·일 구조조정기금(A3Fund)은 발전시설, 항만도로 등 기반시설의 건설과 같이 북한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음.